

주간 통일정세

2016-2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5.21	北 김정은, 완공 앞둔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시찰(연합뉴스)
		北 강석주, 식도암으로 사망·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주역(연합뉴스)
		대북 전문가, 北 최고인민회의 6월 열릴 듯·구호관 제작 지시(연합뉴스)
	5.22	北김영남, 적도기니 대통령 취임식 참석(연합뉴스)
		北 강석주 장례식 국장으로 진행·최룡해 애도시(연합뉴스)
		北 원동연, 조평통 서기국장 임명 확인(연합뉴스)
		北노동당 대표단, 쿠바 방문 위해 평양 출발(연합뉴스)
	5.24	北 김정은, 제염소 시찰·소금은 식량 못지않게 중요(연합뉴스)
5.25	北김영철, 쿠바 공산당과 회담·친선 발전 방안 논의(연합뉴스)	
5.26	北김영철, 라울 카스트로와 회담·김정은 친서 전달(연합뉴스)	
5.27	北 김정은, 병원 건설현장 시찰·당창건 기념일 이전 완공(연합뉴스)	
경제	5.23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경제무역 협조 확대발전(연합뉴스)
		원자재가 하락 대북제재 영향·北中 무역규모 14.7%↓(연합뉴스)
		5.24 대북조치 6년·北 핵실험 도발로 더 강해진 대북제재(연합뉴스)
	5.24	EU 곳곳에 북한 노동자·매년 북한에 2조원 보내(연합뉴스)
	5.25	중국내 北노동자들, 임금 70~80% 본국에 상납(자유아시아방송)
5.26	北, 표적수사로 신흥부자 재산 압수(자유아시아방송)	
5.27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3국 은행 해킹에 북한 연루 정황(연합뉴스)	
사회 문화	5.24	담배 끊어요·北 금연 영상물에 여성 대거 등장(연합뉴스)
		탈북민 대북송금 장부 발각·北주민 600명 조사반이(연합뉴스)
		北 당대회 후유증 심가·선물 차등 지급에 분노(자유아시아방송)
	북한식당 종업원 잇단 탈출 소식에 북중접경 '불안'(연합뉴스)	
5.27	北 김정은, 中 휴대전화 사용자 반역자로 처벌 지시(연합뉴스)	
	北 부모들, 집단 탈북 여파로 자녀 외국행 반대(연합뉴스)	
외교 국방	5.22	오바마, 북한 핵기술 확산한 전례 있어 우려(연합뉴스)
		C7정상, 북핵·미사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연합뉴스)
	5.23	日, 北의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비핵화 의사표명·행동이 먼저"(연합뉴스)

5.24	서세평 北제네바대사, 트럼프 대화발언은 선거용·터무니없어(연합뉴스)
	남중국해 손잡은 美 베트남, 北 핵·미사일 확산 차단도 협력(연합뉴스)
	중국, 4월 대북수입 규모 22.3% 감소·대북제재 가시화(연합뉴스)
	스위스, 캐비아 와인 등 대북금수 사치품목 25개 지정(연합뉴스)
5.25	北 제네바 이어 영국대사도 “트럼프 발언은 선거용·관심없다”(연합뉴스)
	北·美 스웨덴서 민간회의 형식 접촉·전직 국무부 관리들 참석(연합뉴스)
	캐리 美국무, 북한이 가장 첫번째 위협·중국이 초점 아냐(연합뉴스)
	美공군, 북한 핵실험 지진파 탐지 나선다(연합뉴스)
	美외교협회, 북한 때문에 올해 핵비확산 성과 비판(연합뉴스)
	금기권 中관영언론, 北종업원 탈출 보도·시안식당 현지취재도(연합뉴스)
	모니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회원국 첫 사례(연합뉴스)
EU, 북한 파괴기후협정 이행 의지 환영·자발적 감축 참여(연합뉴스)	
5.26	반기문 관훈클럽 문답·北과 고위급 대화채널 열고 있어(연합뉴스)
	美국무부, 불법행위 北외교관 추방 유엔회원국에 촉구(미국의소리)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北, 생각보다 빨리 붕괴될 수 있어”(연합뉴스)
	G7 정상선언, 北 추가 핵실험·미사일발사 말라 경고(연합뉴스)
	반기문, 北과 대화를 향한 길 다시 찾아야 할 것(연합뉴스)
5.27	北, 조만간 5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연합뉴스)
	오바마, 北핵·미사일 세계에 위협·핵무장 결코 인정안해(연합뉴스)
	中, 언론에 북한 발전상·북중우호 긍정 보도 지시(연합뉴스)
	北 매체, 광명성 4호 유엔에 등록 주장(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5. 21.

■ 北 김정은, 완공 앞둔 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 시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의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연건축면적이 3만5천여㎡에 달하는 자연박물관 건설이 드디어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건설자들은 방대하고 아름다운 공사에서 만리마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중앙동물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멋들어지게 전변시켰다”고 밝힘.
- 이날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조용원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함.

2016. 5. 24.

■ 北 김정은, 제염소 시찰…소금은 식량 못지않게 중요(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 폐막 이후 다섯 번째 공개 행보로 평안남도에 있는 제염소를 찾아 현지지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에서 진행하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조사)하시였다”고 보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수행함.

2016. 5. 27.

■ 北 김정은, 병원 건설현장 시찰…당창건 기념일 이전 완공(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 대회 폐막 이후 여섯 번째 공개 행보로 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함.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며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역량 투입과 자재보장 대책도 몸소 세워주시였다

"고 보도함.

- 이날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용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5. 21.

■ 北 강석주, 식도암으로 사망...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주역(연합뉴스)

- 북한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20일 식도암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강석주 동지는 (식도암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주체 105(2016)년 5월 20일 16시 10분 7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면서 “동지의 영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되어 있다”고 밝힘.
- 그의 사망에 따라 북한 외교 진용은 '리수용-리용호' 라인으로 구축됨. 노동당 정부국 국제담당 부위원장직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리수용 전 외무상과 리용호 신임 외무상을 정점으로 한 북한의 새로운 외교 라인이 짜진 것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김계관 제1부상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옴.

2016. 5. 22.

■ 北김영남, 적도기니 대통령 취임식 참석(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0일 적도기니의 수도 말라보에서 열린 적도기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영남 위원장은 적도기니의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적도기니 인민의 위업에 대한 조선(북한)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취임식 전날인 19일 적도기니 대통령이 마련한 연회에도 초대됨.

■ 北 강석주 장례식 국장으로 진행...최룡해 애도사(연합뉴스)

- 북한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장례식이 지난 22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23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강석주의 장례식이 열린 사실을 알리면서 “수도시민은 강석주 동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금할 수 없어 발걸음을 멈추고 영구차를 오래도록 바라왔다”고 전함.

- 장례식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 리수용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함.
- 강석주는 평양 형제산 구역의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릉에 묻힘.

■ 北 원동연, 조평통 서기국장 임명 확인(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분야 '2인자'로 꼽혀온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22일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원동연 서기국 국장 명의 담화를 발표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함.
- 북한 매체가 원동연의 조평통 서기국 국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5. 25.

■ 北김영철, 쿠바 공산당과 회담…친선 발전 방안 논의(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대표단과 쿠바 공산당 대표단의 회담이 지난 23일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박창을 쿠바 주재 북한 대사, 쿠바 측에서는 살마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함.
- 양측은 회담에서 각 당의 활동을 소개하고 상호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함.

2016. 5. 26.

■ 北김영철, 라울 카스트로와 회담…김정은 친서 전달(연합뉴스)

- 쿠바를 방문 중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2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부위원장이 카스트로 제1비서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와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힘.
- 카스트로 제1비서는 “북한과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동지적·형제적 관계”라면서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쿠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회담에는 박창을 쿠바 주재 북한 대사, 호세 라몬 마차도 벤투라 쿠바 공산당

제2서기,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 호세 라몬 발라게르 쿠바 공산당 국제부장이 동석함.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5. 21.

■ 대북 전문가, 北 최고인민회의 6월 열릴 듯…구호판 제작 지시(연합뉴스)

- 최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치른 북한이 오는 6월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는 대북 전문가의 주장이 나옴.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1일 북한 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맞이할 구호판을 제작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이를 보면 최고인민회의가 6월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함. 또 “(이렇게 되면) 4월이나 12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던 기존 관례를 벗어나 매우 이례적이 된다”고 말함.

2016. 5. 22.

■ 北노동당 대표단, 쿠바 방문 위해 평양 출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21일 쿠바 방문길에 올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22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 노동당 대표단이 쿠바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2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짚막하게 전함.
- 하지만, 통신은 방문 목적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2. 경제

가. 정책 동향

2016. 5. 23.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경제무역 협조 확대발전(연합뉴스)

- 제19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23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리룡남 대외경제상, 김인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주 북한 각국 외교 대표 및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함.
- 박용식 조선국제전람회 사장이 개막 연설을 하고 이어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이 축하 연설함.
- 앞서 북한은 올해 17개국 220여 회사가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힘. 이는 지난해 참가 업체 수 300곳에서 크게 줄어든 것임.

나. 주요조치

2016. 5. 26.

■ 北, 표적수사로 신흥부자 재산 압수(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공안당국이 돈을 노린 표적수사로 신흥부자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양강도의 대북 소식통은 RFA에 “최근 혜산시에서 보위부가 (표적수사로) 돈주(錢主)로 불리는 신흥부자의 재산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압수된 재산의 규모만 중국 돈 수백만 위안에 달한다”고 전함.
- 공안당국은 주로 노동당이나 사법기관과 인맥이 없는 이들만 골라서 표적수사의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덧붙임.

다. 경제 상황

2016. 5. 24.

■ EU 곳곳에 북한 노동자...매년 북한에 2조원 보내(연합뉴스)

- 유럽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럽에서 강제 노역하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매년 2조원 안팎을 송금 받는다는 증언이 나옴.
-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짐.

-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함. 북한 노동자가 고용되는 것은 이들이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은 적음.
-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은 유럽인권보호조약 등 많은 EU 법과 국제 조약을 위반함. 특히 노동자가 자신이 번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점은 완벽한 국제법 위반임.
- 최근 EU, 스위스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기 위해 제재 대상자를 늘리고 북한인의 금융계좌를 폐쇄하는 등 한층 강화된 조치를 취함.

2016. 5. 25.

■ **중국내 北노동자들, 임금 70~80% 본국에 상납(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북한 당국에 바치는 상납금 때문에 이들의 생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2014년 10월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 임금은 월 410~490 달러(약 49만~58만원) 정도라고 RFA는 전함.
- 현지 소식통은 이 매체에 “(당시) 북한 노동자는 이보다 40%가량 적은 245~260 달러 정도를 받았지만, 올해는 300~400달러를 받는다”며 “하지만 예전처럼 임금의 70~80% 정도를 충성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상납하다 보니 실수령액은 80~100달러밖에 안 된다”고 말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5. 23.

■ **원자재가 하락 대북제재 영향·北-中 무역규모 14.7%↓(연합뉴스)**

- 철광석과 무연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규모가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과 최유정 연구원은 23일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중 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힘.
- 보고서는 “무역 축소, 특히 수입 감소는 부족한 생필품과 중간재, 자본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후생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은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5·24 대북조치 6년…北 핵실험 도발로 더 강해진 대북제재(연합뉴스)**

- 오는 24일이면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 6년이 됨.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서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지금은 5·24 조치 발표 당시 예외로 인정됐던 개성공단 가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된 상태임.
-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정부가 제재와 압박을 가면서도 물밑에선 출구전략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함.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재와 압박에만 올인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며 “한편으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양 교수는 북한이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군사회담을 역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임.

2016. 5. 27.

■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3국 은행 해킹에 북한 연루 정황(연합뉴스)**

- 지난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을 비롯해 최근 몇 달간 동남아 3개국에서 발생한 은행 해킹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안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함.
- 정보보안업체 시만텍의 의뢰로 이들 은행 해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올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작년 12월 베트남 티엔 풍 은행, 작년 10월 필리핀 한 은행에서 발생한 3건의 은행 해킹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5. 24.

■ **담배 끊어요…北 금연 영상물에 여성 대거 등장(연합뉴스)**

- 북한이 관영 TV를 통해 방영한 금연 홍보영상물에 여성들을 대거 등장시킴.
- 조선중앙TV는 지난 20일 ‘생명을 위협하는 특등 기호품’이라는 제목으로 40분 분량의 금연 소개편집물(영상물)을 방영함.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24일 “북한이 TV에 여성들을 대거

등장시켜 그들의 의견을 인터뷰로 싣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성인 남성의 높은 흡연율을 낮추려고 기존과는 다른 캠페인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조선중앙TV에 앞서 노동신문은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4월24일), ‘법적 통제 밑에 강화되는 금연활동’(5월2일), ‘국제적인 금연 움직임’(5월15일) 등 올해 들어 세 차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고,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7일 각 도 소재지들에 설립된 금연연구보급기지들이 평양에 있는 조선금연연구보급소를 중심으로 금연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함.

2016. 5. 27.

■ **北 김정은, 中 휴대전화 사용자 반역자로 처벌 지시(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탈북과 내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을 반역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최근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남조선 괴뢰와 결탁한 반역자로 취급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남한과 통화하면 ‘처형도 가능하다’는 (공안 당국의) 으름장에 국경 지역은 말 그대로 살벌한 분위기”라고 전함.
- 북한은 2014년 1월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히 차단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주민들에게 과거 잘못을 자수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5. 24.

■ **탈북민 대북송금 장부 발각...北주민 600명 조사받아(연합뉴스)**

-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의 대북 송금 장부가 북한 공안기관에 발각돼 관련자 600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이 24일 보도함.
-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생활하며 대북 송금 중개인 역할을 했던 한 탈북민이 송금·입금 장부를 탈북 전 북한에 두고 왔고, 최근 공안기관의 가택 수색으로 이 ‘살생부’가 발각됐다”고 전함.
- 또 다른 소식통은 “조사대상에는 탈북자 가족뿐만 아니라 보위원, 보안원, 당 간부

까지 이름이 올라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라. 사회 동향

2016. 5. 24.

■ 北 당대회 후유증 심각…선물 차등 지급에 분노(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차등 지급하는 바람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환상을 가졌던 20대까지 분노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RFA에 “이번 당대회에선 참가자 직위에 따라 선물이 지나치게 차별화됐다”며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에는 직위나 계급 차별 없이 대회 참가자에게 선물을 공정하게 나눠줬다”고 말함.
- 자강도의 소식통은 “7차 당대회 참가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최고 4천 달러(약 473만원)에서 4 달러(4천735원) 상단에 이르는 선물이 지급됐다”며 “참가자들은 물론 간부와 주민들도 선물 차별화에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함.

■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소식에 북중접경 ‘불안’(연합뉴스)

- 지난달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사건에 이어 또다시 식당 종업원 탈출 소식이 전해지자 북중 접경지역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달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귀순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테러·납치 가능성이 우려되는데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위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접경지역 활동가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2016. 5. 27.

■ 北 부모들, 집단 탈북 여파로 자녀 외국행 반대(연합뉴스)

- 최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 부모들이 자신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해 자녀의 외국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함.
-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NK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해외 노력 송출이 위축되자(북한 당국은) 중국 파견 노동자의 봉급을 올리면서 대열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외국행을 반대하

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중국에서 몇 달 전만 해도 북한 노동자 채용은 간부 인맥만으로 손쉽게 해결됐지만,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발생 이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서 “그동안 (북한) 여성들을 채용했던 중국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말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5. 22.

■ 오바마, 북한 핵기술 확산한 전례 있어 우려(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는 핵기술을 확산시킨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22일 NHK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26~2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기 앞서 NHK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들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감시와 대북 제재 이행을 철저히 할 필요성을 강조함.
- 그러면서 오바마는 “국제 사회는 북한을 고립시키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함.

2016. 5. 24.

■ 서세평 北제네바대사, 트럼프 대화발언은 선거용…터무니없어(연합뉴스)

- 서세평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일축함.
-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서 대사는 이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만날지 말지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달릴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 트럼프의 생각이나 말은 말도 터무니없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서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의 일원으로서 핵을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우리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또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의 일원으로서 핵기술의 비확산 의무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임.

■ 남중국해 손잡은 美-베트남, 北 핵·미사일 확산 차단도 협력(연합뉴스)

- 미국과 베트남이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등 북한의 확산 행위를 차단하고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인 2270호의 전면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확인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 다이 팡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베트남 관계 현황설명서'(Fact Sheet)를 채택함.
- 미국과 동남아 국가가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산행위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2016. 5. 25.

■ 北 제네바 이어 영국대사도 “트럼프 발언은 선거용…관심없다”(연합뉴스)

- 북한의 제네바대표부 대사에 이어 영국 대사가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선거용으로 관심이 없다”고 일축함.
-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는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선거용 전략으로 간주하며 관심이 없다”고 밝힘.
- 주요 외교공관의 북한 대사들이 일제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을 “선거용”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차후 북·미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일종의 복선을 깔아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北-美, 스웨덴서 민간회의 형식 접촉…전직 국무부 관리들 참석(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이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랙 2'(민간) 차원의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짐.
- 24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들은 오는 29일께 1박 2일간 일정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임.
- 북한 측에서는 대표적인 미국통인 한성렬 외무성 미국 국장과 최선희 부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리용호 신임 외무상 기용에 따른 인사 등으로 실제 두 사람이 나올지는 미지수임.
- 미국 측에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토머스 피커링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음.

■ **케리 미국무, 북한이 가장 첫번째 위협…중국이 초점 아냐(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첫 번째 위협’(primary threat·lead threat)이라고 규정함.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을 방문했던 케리 장관은 이날 호치민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위협은 북한이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며) 북한의 핵확산 활동”이라고 밝힘.
- 케리 장관은 이어 “중국이 국제규범에 의해 움직이는 한 우리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규범에 근거해 항행의 자유와 행동강령, 평화적 해결, 외교적 과정을 추구해왔으며 이것은 냉전 이후 시기를 관통해온 미국 정책의 상징”이라고 덧붙임.

■ **美공군, 북한 핵실험 지진파 탐지 나선다(연합뉴스)**

- 미국 공군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지진파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 공군은 즉각 특수정찰기를 띄워 한반도 상공의 방사능 물질을 탐지·포집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직접 지진파 탐지를 위한 역량 개발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됨.
- 상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식별 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美외교협회, 북한 때문에 올해 핵비확산 성과 비관(연합뉴스)**

- 올해 들어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노력이 지난해보다 소폭 진전됐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 때문에 올해의 비확산 성과가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미국 정책 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CFR)가 24일(현지시간) 지적함.
- 이 연구기관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를 평가하는 ‘2016 국제협력 보고서’ 가운데 비확산 항목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의 투발수단 보유를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체제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함.
- 북한이 최근 실시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 실험 역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적인 비확산 활동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보인다”고 이 연구기관은 밝힘.

2016. 5. 26.

■ **美국무부, 불법행위 北외교관 추방 유엔회원국에 촉구(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가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라고 유엔 회원국들에

- 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함.
 -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근로자 해외 파견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발동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에 북한의 근로자 해외 파견을 겨냥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며 “미국은 북한에 불법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北, 생각보다 빨리 붕괴될 수 있어”(연합뉴스)

-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내부 불안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샤프 전 사령관은 미국 하와이에서 미 육군 지상전 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와 군사전문매체인 밀리터리 닷컴이 25일 보도함.
-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도 같은 세미나에서 “비무장지대(DMZ) 양쪽에서 지난 3~4년간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인 상태”라며 “선전물을 담은 풍선 날리기에 서부터 선전방송, DMZ에서의 교전 등으로 우리는 오관과 긴장고조의 높은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밝힘.

2016. 5. 27.

■ 오바마, 北핵·미사일, 세계에 위협…핵무장 결코 인정안해(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함.
- 27일 발행된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핵군축 노력을 설명한 뒤 “앞으로도 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았으며, 가장 곤란한 과제의 하나가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힘.
- “그래서 우리는 사상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북한에 부과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왔다”며 “우리가 일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과 3개국 협력을 증진하고 역지력과 방위력을 강화해 온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면서 “우리 나라들(한미일)은 단결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핵무장을 한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나. 북·중 관계

2016. 5. 24.

■ 중국, 4월 대북수입 규모 22.3% 감소…대북제재 가시화(연합뉴스)

- 중국의 지난 4월 대북 수입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22.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4월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 달이어서 중국의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24일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1억6천138만 달러로 지난해 4월에 비해 22.35% 급감함.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억6천800만 달러로 1.53% 감소함.
- 이에 따라 4월 북·중간 전체 교역액은 4억2천941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54% 줄.

2016. 5. 25.

■ 금기 깬 中관영언론, 北종업원 탈출 보도…시안식당 현지취재도(연합뉴스)

-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한 북한식당 내 여종업원들의 추가탈출 사건에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가 현지취재까지 나서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여 주목됨.
- 탈북자 문제는 북·중 간에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국 내 민영언론 매체들도 부득이 한 경우 한국을 비롯한 외신을 인용해 보도해왔다는 점에서 글로벌타임스의 이런 적극적인 보도의 배경에 관심이 쏠림.
- 이 신문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 탈출 보도로 범상치 않은 북·중 관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2016. 5. 27.

■ 中, 언론에 북한 발전상 북중 우호 긍정 보도 지시(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상과 북·중 우호 관계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보도하라고 언론에 지시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중화권 매체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이 26일 보도함.
- 이 매체는 베이징(北京)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공산당 중앙 선전부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함.
- 그러나 이 보도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이와 배치되는 보도들도 나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다. 북·일 관계

2016. 5. 23.

■ 日, 北의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비핵화 의사표명·행동이 먼저”(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사표명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23일 “북한의 대화 제의가 그동안 대북제재의 효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먼저 비핵화 의사표명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스가 장관은 “일본은 한국·미국과 확실하게 연대를 하면서 북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라. 북·러 관계

2016. 5. 25

■ 모나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회원국 첫 사례(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을 한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유럽의 모나코가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행보고서(Implementation Report)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모나코는 최근 안보리 결의 2770호에 따라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대북제재위는 유엔 공용어로 번역을 거쳐 이행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5. 22.

■ G7정상, 북핵·미사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연합뉴스)

- 오는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이 올 들어 실시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표현이 명기됨.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초 열린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했지만, G7 정상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목소리로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하고 나서 는 것임.

2016. 5. 24.

■ 스위스, 케비아·와인 등 대북금수 사치품목 25개 지정(연합뉴스)

- 스위스가 대북 독자제재를 위한 수출금지 사치품목 25개를 지정했다고 미국 자유 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가 공시한 시행령에 포함된 이번 대북 금수품목은 총 25개로, 앞으로 북한에 이들 품목의 판매·공급·수출·중계가 전면 금지됨.
- 스위스가 이번에 지정한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은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금수 품목(12개)의 두 배가 넘는 것임.

2016. 5. 25.

■ EU, 북한 파리기후협정 이행 의지 환영...자발적 감축 참여(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북한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자발적 감축목표 기여방안’(INDC) 제출을 시사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랙티브가 25일 보도함.
- 델베케 총국장은 “북한이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이행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조금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함. 북한은 파리기후변화협정 당사국으로서 이 협정에 서명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반기문 관훈클럽 문답...北과 고위급 대화채널 열고 있어(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남북 간 대화채널 유지해온 것은 제가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 방한 중인 반 총장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북한과) 고위급 간에 대화채널 열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제 생각엔 남북문제는 숙명”이라며 “대북 압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인도 적 문제를 통해 물꼬를 터 가며 대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힘.

2016. 5. 26.

■ **G7 정상선언, 北 추가 핵실험·미사일발사 말라 경고(연합뉴스)**

-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7개국(G7)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경고하는 정상선언을 27일 발표함.
- 26~27일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채택될 정상 선언 초안에는 “(올 들어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NHK가 26일 보도함.
- 또 북한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과, 앞으로 어떠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NHK는 전함.

■ **반기문, 北과 대화를 향한 길 다시 찾아야 할 것(연합뉴스)**

-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함.
- 반 총장은 이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저는 북한에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힘.
- 반 총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에도 저해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처만 입힐 뿐”이라면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지만 북한의 어린이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함.

2016. 5. 27.

■ **北 매체, 광명성 4호 유엔에 등록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이용해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유엔에 공식 등록했다고 주장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우리나라는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 체결국으로서 위성등록을 위한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면서 “최근 유엔 우주사무소가 광명성 4호의 등록과 관련한 유엔공식문건(ST/SG/SERE/768)을 작성하여 유엔 우주사무소 웹(웹)사이트 위성 등록부와 유엔 전자문서고 웹사이트에 각각 게재했다”고 보도함.
- 그러나 위성등록을 위한 문건의 제출 및 웹사이트 등록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5. 26.

■ 北, 조만간 5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연합뉴스)

- 최근 들어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이 조만간 제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옴.
- 정재홍·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조만간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 두 연구위원은 또 개혁 성향이 강한 박봉주 내각 총리와 지난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봄.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5.25	한미일 국방장관 다음달 초 싱가포르서 회담·북핵 대응 논의(연합뉴스)	
	5.26		美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국방수권법서 사드 배치 공식촉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5.23	윤병세·류치바오 오찬·북핵·북한문제 협력 강화하기로(연합뉴스)	
		김종덕 장관·류치바오 부장, 한중 문화산업 협력 강화키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5.24		日역사학계, 위안부 헌일합의에 '피해자 의견 중시' 제언할 듯(연합뉴스)
			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부당한 차별언동 용인불가(연합뉴스)
	5.25	이시히 "홍용표 통일장관 내달초 일본방문 추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5.22		中, 아시아순방 오바마의 中견제 행보에 우려 속 촉각(연합뉴스)	
	5.23	美 중국 포위구도 구축·총부리 겨눴던 베트남에도 '무기 공급'(연합뉴스)	中, 美베트남 밀착에 '경계모드'... '지역 평화안정' 강조(연합뉴스)	
		中 남해함대, 서태평양서 실탄사격훈련... 美 겨냥한 듯(연합뉴스)		
	美中, 전투기 '근접비행' 대책 모색 군사당국회의(연합뉴스)			
	5.24	오바마, 대국이 소국 괴롭혀선 안돼... 中 격양된 반응(연합뉴스)		
	5.25		中, 분쟁지역 우디섬 공항 확장·美베트남 밀착에 맞불(연합뉴스)	
中, SCO 성명으로 美 남중국해 압박에 맞불(연합뉴스)				
5.26		中, G7 정상회의 각아 내리며 오바마 방일·대중압박 경계(연합뉴스)		
	중국, 평화 전쟁 중간 회색지대 대결서 미국에 우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22	오바마 '역사적 아시아 순방' 올라... 히로시마 행보 초미 관심(연합뉴스)		
	5.23		오카니와 지사, 美군무원 만행 오바마에 직접 말하고 싶다(연합뉴스)	
		아베, 오바마에 이어 히로시마서 '소감' 발표(연합뉴스)		
	5.24		日 여론조사서 '美원폭투하 용서불가' '이해론' 엇비슷(연합뉴스)	
		오바마의 히로시마 현화장소에 피폭자 초대 검토(연합뉴스)		
5.25	오바마, 히로시마 메시지 들고 오늘 방일...			

		아베와 정상회담(연합뉴스)	
	5.26	미일 北위협에 대한 억지력·방위능력 강화 합의(연합뉴스)	
		미일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미군의 日여성 살해사건(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	----	----	-----

미러 관계	5.24	미국무 “러시아, 민간인 공습 중단하도록 시리아정권 압박해야”(연합뉴스)	
		미군정찰기 위협비행vs정기 정찰임무·라미 신경전(연합뉴스)	
	5.25	미국 시리아서 러시아와 연합 군사작전 계획 없다(연합뉴스)	
			러 미국 우주인 우주정거장 운송 시업 2018년 종료(연합뉴스)
	5.26	마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통화·회담 재개 방안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	----	----	----

중일 관계	5.25	中 ‘다오위다오’ 군사시설 촬영 일본인 간첩 혐의 기소(연합뉴스)	
		中 C7 남중국해 성명 전망에 격앙·이기적 일본의 허튼수작(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	----	----	-----

중러 관계			
-------	--	--	--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	----	----	-----

일러 관계			
-------	--	--	--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5. 25.

■ 한미일 국방장관, 다음 달 초 싱가포르서 회담…북핵 대응 논의(연합뉴스)

-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초 만나 북핵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함.
- 국방부는 “6월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25일 밝힘.
-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황 공유 및 평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됨.

2016. 5. 26.

■ 美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국방수권법서 사드 배치 공식촉구(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함.
-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가드너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S. 2943)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 의회의 입장’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함.
- 의회 소식통들은 현재 상원에 상정된 국방수권법안을 놓고 다양한 형태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가드너 의원의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함.

나. 한·중 관계

2016. 5. 23.

■ 윤병세-중류치바오 오찬…북핵·북한문제 협력 강화하기로(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 방한 중인 류치바오(劉奇葆<쑤머리 아래 保>)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윤 장관과 류 부장은 한중관계가 양국 정상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내

- 년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 또 지난해 ‘중국 관광의 해’에 이어 올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양국 간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김종덕 장관-류치바오 부장, 한중 문화산업 협력 강화키로(연합뉴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류치바오(劉奇葆<艸머리 아래 保>)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은 23일 양국의 문화산업 협력과 인문 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문체부가 23일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에 앞서 류 부장과 가진 면담에서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문화산업 발전 펀드 조성’과 ‘한중 방송 분야 공동 제작 협정’ 등에 중국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함.
- 면담은 양국 정부 관계자 5명씩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20분가량 진행됨.

다. 한·일 관계

2016. 5. 24.

■ **日역사학계, 위안부 한일합의에 ‘피해자 의견 중시’ 제언할 듯(연합뉴스)**

- 일본 역사학계의 여러 단체가 한국·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역사학연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학·역사교육관계 단체의 성명을 이달 30일 도쿄에서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성명에는 작년 말 이뤄진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합의에 관한 논평이 포함됨.
- 이들은 특히 합의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할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단체인 역사학연구회 등 16개 역사단체는 작년 5월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서 실증돼 왔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후 이 성명에 찬성하는 단체가 20개로 늘었음.

■ **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부당한 차별언동 용인불가(연합뉴스)**

-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됨.
-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통과시킴.
- 일본 사회에서 근년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혐한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2016. 5. 25.

■ **아사히 “홍용표 통일장관, 내달초 일본방문 추진”(연합뉴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내달 초 일본을 방문할 전망이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함.
- 홍 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일본의 각료, 전문가 등과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함.
- 한국 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등과의 면담을 희망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소개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5. 22.

■ **中, 아시아순방 오바마의 中견제 행보에 우려 속 촉각(연합뉴스)**

-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일본 방문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깔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미국이 1984년부터 적용해온 대(對)베트남 무기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2016. 5. 23.

■ **美, 중국 포위구도 구축…총부리 겨눴던 베트남에도 '무기 공급'(연합뉴스)**

-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구도가 본격화되고 있음.

- ‘아시아 재균형’을 표방하며 미국 주도의 역내질서 구축에 필수적인 일본과 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을 적극적으로 겨안는 행보를 보란듯이 과시하고 나선 것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썬 다이 팡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기금수를 전면 해제한 것이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임.
- 적대적 관계를 뛰어넘어 ‘실리’를 중심으로 외교관계의 틀을 새로 짜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임.

■ 中, 美-베트남 밀착에 ‘경계모드’...‘지역 평화안정’ 강조(연합뉴스)

- 미국과 베트남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이 이들 국가의 새로운 밀착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3일 사설에서 베트남이 미국의 힘을 빌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경제 발전을 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 속내를 분석함. 그러나 베트남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공격, 베트남의 식민지 역사 등을 거론하며 “하노이(베트남)가 필리핀처럼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베트남은 중국의 대형 구축함 등을 견제할 미국산 정밀 레이더나 정찰기 구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中 남해함대, 서태평양서 실탄사격훈련...美 겨냥한 듯(연합뉴스)

-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戰區) 산하 남해함대가 서태평양 해상에서 21일 실탄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함.
- 23일 중국군망(中國軍網)에 따르면 남해함대 소속 구축함 허페이(合肥)호·란저우(蘭州)호, 프리깃함 쓰야(三亞)호, 종합보급함 홍후(洪湖)호로 구성된 편대가 지난 21일 서태평양의 모 해상에서 실제 무기를 사용한 훈련을 진행함.
- 중국은 미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자 중국은 함정과 전투기로 맞불을 놓는 등 군사력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美中, 전투기 ‘근접비행’ 대책 모색 군사당국회의(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오는 24~25일 군사 당국 간 회의를 열어 최근 남중국해상에서 발생한 전투기 간 근접비행 사건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3일 미국 하와이 현지신문을 인용, 양국 간 해상 군사안전 회의가 24~25일 하와이에서 개최된다고 보도함.
- 미국 측은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에 15m까지 근접해 위협하게 진로를 방해했

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맞서면서 미국을 향해 도발을 먼저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음.

2016. 5. 24.

■ **오바마, 대국이 소국 괴롭혀선 안돼...中 격앙된 반응(연합뉴스)**

- 베트남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중 연설을 통해 간접 화법으로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조장을 말라고 공격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국립 컨벤션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함.
-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베트남·필리핀·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됨.

2016. 5. 25.

■ **中, 분쟁지역 우디섬 공항 확장...美·베트남 밀착에 맞불(연합뉴스)**

-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용싱다오<永興島>)에서 공항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음.
- 25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식홈페이지인 중국군망(中國軍網)이 전날 우디 섬 탐방기를 게재하고 이런 사실을 확인함.
- 중국은 2012년 7월 파라셀군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등을 묶어 썬사(三沙)시를 출범시키고 우디섬에 시 청사를 건립함. 최근에는 이 섬에 지대공 미사일 홍치(紅旗·HQ)-9, 최신예 쟈(殲)-11 전투기 16대 등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中, SCO 성명으로 美 남중국해 압박에 맞불(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이 자국을 지지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성명으로 맞불을 놓음.
- 중국은 지난 23~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경제 협력체인 SCO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원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는데 공을 들임.
- SCO 회원국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모든 분쟁은 당사국 간의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적인 이슈화와 외부세력

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혀 중국을 지지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5일 밝힘.

2016. 5. 26.

■ **中, G7정상회의 깎아 내리며 오바마 방일·대중압박 경계(연합뉴스)**

-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한 대중 압박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국 관영 언론은 특히 G-7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자국을 비판하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G-7 회의의 의미를 애써 깎아내리려는 태도도 보임.
-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6일 사설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몰이를 시도해 온 미국과 일본이 G-7 무대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이에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와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힘.
- 관영 신화통신은 “G-7 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는 이상이 매우 크지만 실제 직면한 현실은 그 반대”라면서 “글로벌 경제성장 문제, 국제 및 지역 문제 등에서 모두 G-7 회원국들은 힘이 부족해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함.
-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도 G-7 정상회의에서 경제 문제, 테러대응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각국의 입장과 회원국 간 내부 모순이 심각해 힘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 **중국, 평화·전쟁 중간 회색지대 대결서 미국에 우위(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은 전쟁과 평화의 중간 지대인 회색지대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이 이 대결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미국 학자들이 분석함.
- 미국육군대학 전략연구소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굴기(掘起·우뚝 일어섬)대국’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 미국이 회색지대에서 팽팽한 대결에 들어갔다면서 남중국해 분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VOA는 미국이 지난 2년간 중국 주변국과의 방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회색지대 경쟁에서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고 평가함.

나. 미·일 관계

2016. 5. 22.

■ 오바마 '역사적' 아시아 순방 올라...히로시마 행보 초미 관심(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역사적인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 27일까지 일주일간 베트남과 일본 방문으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은 상징성이 자못 큼. 과거 적국으로서 전쟁까지 치렀던 역사의 상흔을 씻어내고 새롭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정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임.
- AF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20세기에 치러진 두 개의 전쟁에 따른 고통스러운 장(章)을 매듭짓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함.

2016. 5. 23.

■ 오키나와 지사, 美군무원 만행 오바마에 직접 말하고 싶다(연합뉴스)

- 미군 군무원이 20살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오키나와인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음.
-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23일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25~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오나가는 주일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오키나와에 집중된 상황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 뒤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 정부의 책임으로 일미지위협정의 수정을 포함한 발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국민의 마음에 기반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엄정한 대처를 요구할 것”이라며 오는 26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 때 이번 사건을 거론할 방침을 밝힘.

■ 아베, 오바마에 이어 히로시마서 '소감' 발표(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피폭지 히로시마(廣島)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별도의 소감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제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아베 총리도 이어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겠다는 것임.
- 미일 정부는 두 정상 소감 발표 장소로 워싱턴 앞이나 워싱턴 앞 등을 놓고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짐. 비가 와서 외부에서 소감발표가 어려우면 공원 내 국제회

의장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임.

2016. 5. 24.

■ **日여론조사서 ‘美원폭투하 용서불가’·‘이해론’ 엇비슷(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해 ‘용서불가’ 견해와 ‘이해론’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유효응답 1천 877명)에서 미국이 2차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데 대한 견해를 묻자 31%가 ‘비인도적인 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답함. 반면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는 응답이 22%, ‘전쟁이었기에 당연하다’는 응답이 8%로 각각 나타나 미국을 이해하는 취지의 응답이 합계 30%로 집계됨. 또 ‘비인도적이지만 지금은 그리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33%였음.
- 아울러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평가한다’(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응답이 89%로, ‘평가하지 않는다’(4%)는 응답을 압도함.

■ **오바마의 히로시마 현화장소에 피폭자 초대 검토(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의 피폭지 히로시마(廣島)를 방문, 위령비에 현화하는 현장에 원폭 피해자들을 초대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함.
- 신문에 의하면, 히로시마에 동행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현화하고 묵념하는 자리에 피폭자들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음.
- 다만 대통령과 피폭자의 대면은 '미국의 사죄'로 비칠 수 있기에 그 방법과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양국이 협의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함.

2016. 5. 25.

■ **오바마, 히로시마 메시지 들고 오늘 방일...아베와 정상회담(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일본을 방문, 이날 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함.
- 베트남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중 전용기 편으로 일본을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회담은 오후 9시께 열리는

- 방안이 유력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오바마가 공원 안에 별도로 설치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을지에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24일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공원 내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아직 조정 중"이라고만 밝힘.

2016. 5. 26.

■ **미일, 北위협에 대한 억지력·방위능력 강화 합의(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방위능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말함.
- 북한 문제는 26~27일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제로도 다뤄지며 G7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 양측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음.

■ **미일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미군의 日여성 살해사건(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함.
-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주 오키나와(沖縄)에서 발생한 미 군무원에 의한 일본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 다음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발표 및 문답 내용 요지.
 - ▲ 오바마 대통령은 오키나와의 여성 살해·유기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일본측의 수사에 전면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또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
 - ▲ 아베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항의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 및 엄정한 대응을 요구.
 - ▲ 두 정상은 미일지위협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
 - ▲ 두 정상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 부담 경감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 ▲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피폭지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환영함. 두 사람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확인.
 - ▲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방위 능력 강화에 합의.

다. 미·러 관계

2016. 5. 24.

■ 미국무 “러시아, 민간인 공습 중단하도록 시리아정권 압박해야”(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과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도록 러시아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함.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수행 중인 케리 장관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무부가 밝힘.
- 케리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는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하는 공습을 중단하도록 시리아 정권을 압박하는데, 또 유엔의 결의에 따른 구호물자가 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그리고 (시리아 정권 등 당사자들이) 적대적 행위의 완전한 중단에 합의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 미군정찰기 위험비행vs정기 정찰임무…러-미 신경전(연합뉴스)

- 러시아 국방부가 자국 주재 미국 국방 무관을 초치해 최근 극동 동해 상공에서 발생한 미군 정찰기의 위험한 비행에 대해 항의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대사관의 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미군 정찰기가 동해 상공에서 식별 신호 송신 장치(트랜스폰더)를 끈 채 민간 항공기에 근접 비행하면서 충돌 위험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함.
-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국 정찰기에 러시아 공군기들이 위험한 근접 비행을 한다고 비난해 옴.

2016. 5. 25.

■ 미국, 시리아서 러시아와 연합 군사작전 계획 없다(연합뉴스)

- 미국이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러시아와 연합 군사작전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힘.
- 미셸 발단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미국과의 연합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 “현 단계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어떤 연합군사작전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미·러 간에는 시리아 영공에서의 양국 공군기 비행안전보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효율적으로 준수되고 있고 시리아 내 휴전 체제 유지를 위해 양국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군사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함.

■ 리, 미국 우주인 우주정거장 운송 사업 2018년 종료(연합뉴스)

- 러시아가 자체 로켓과 우주선을 이용해 미국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러시아 우주당국이 24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부사장 세르게이 사벨리예프는 이날 “미국 우주인을 ISS로 운송하는 서비스 계약을 기존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이후에는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함.
- 현재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2018년까지의 계약만 체결돼 있고 그 이후 기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이같이 소개함.
- NASA도 이날 2018년 이후엔 러시아와 우주인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

2016. 5. 26.

■ 마-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통화…회담 재개 방안 논의(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5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밝힘.
- 외무부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 모색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함.

라. 중·일 관계

2016. 5. 25.

■ 中 ‘다오위다오’ 군사시설 촬영 일본인 간첩혐의 기소(연합뉴스)

-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던 일본인이 중국과 일본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관련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당국은 지난해 5월 저장(浙江)성에서 체포한 50대 일본인 남성의 기소 사실을 최근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중국 인터넷매체 국제재선(國際在線)이 25일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반(反)간첩법을 제정한 데 이어 작년에는 새로운 국가안보법을 시행하며 외국인의 첩보활동 차단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간첩행위에 대한 강경 처벌을 공언해온 바 있음.

■ 中, G7 남중국해 성명 전망에 격앙…이기적 일본의 허튼수작(연합뉴스)

-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를 강하게 성토했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중국당국이 발끈하고 나섬.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해(남중국해)에서의 우리 행동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중국은 남해지역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익이 다시는 침해받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특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함. 화 대변인은 일본이 쉬지 않고 남중국해 문제를 부각하고 “모순을 촉발하고 긴장을 조성하려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에 의장국이 된 기회를 틈타 “자기 이익을 쟁기고 허튼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몰아세움.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5.23	캐나다, 올 들어 탈북 난민 수용 '0'(자유아시아방송)
		중국 내 북 식당 종업원 외출 금지(자유아시아방송)
	5.25	獨 체크포인트찰리박물관서 北인권참상 기록물 상설 전시(연합뉴스)
	5.26	드론에 남한 드라마 실어 북한 주민에 배달(연합뉴스)
	5.27	북한 광물수출은 강제노동 산물...수출 규제해야(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5.24	北매체, 반기문 총장에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중재 요구(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5.23	민변, 北종업원 가족 위임받아 인신구제 청구(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5.23	대북 소식통,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들 또 탈북(연합뉴스)
		北회령서 세 가족 탈북하다 보위부에 체포(데일리NK)
	5.25	中, 北식당 종업원 탈출사건에 "모른다"...확인 거부(연합뉴스)
		탈출 북한식당 종업원 3명 중 1명도 태국으로 이동 중(연합뉴스)
대북지원	5.25	국제적십자사연맹,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 차질(연합뉴스)
	5.26	국제적십자, 北농촌 가뭄·홍수 대비 지원(연합뉴스)
	5.27	인도, WFP 대북사업에 1백만 달러 지원...2011년 후 처음 (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5. 23.

■ 캐나다, 올 들어 탈북 난민 수용 '0'(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탈북 난민을 한 명도 수용하지 않음.
- 이민·난민국 공보담당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통계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 기간 새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33명이라고 덧붙임.
- 2012년 12월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난민 심사 과정에서 한국에 정착한 후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에 대한 색출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이미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에 대해서도 한국에 정착해 박해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해 '한보이스'와 '캐나다 북한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캐나다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탈북자를 심사하고 난민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10년 여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자유당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아직 이 같은 캐나다 대북인권 단체들의 요구에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임.

■ 중국 내 북 식당 종업원 외출 금지(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당국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유일한 낙인 단체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소식통은 “식당 종업원들의 외출금지 조치가 약 한 달 전에 시행된 것으로 보아 Ningbo(寧波)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출 사건 직후에 내려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함.
- 소식통은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보통 점심 영업이 끝난 시간에 4~5명씩 조를 이뤄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외출을 허용했는데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식당과 숙소만 오가는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함.
- 한편 북한 식당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 이후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일상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앞서의 대북 소식통은 “저녁 10시 경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숙소에서 생활총화와 당 대회 학습 등을 해야 한다”면서 “종업원들은 보통 1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들 수가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또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숙소에는 텔레비전이 없어 중국 텔레비전방송 시청도 불가능하다”면서 “이쯤되면 식당 북무원들은 평양에 있을 때보다 더 외부 정보와 차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최근 지인들과 북한식당을 다녀왔다는 한 중국인은 “예전 생각만 하고 공연장면을 촬영하다가 종업원들로부터 ‘식당 규정’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했다”면서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해도 선뜻 응하지 않는 등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함.

2016. 5. 25.

■ 獨 체크포인트찰리박물관서 北인권참상 기록물 상설 전시(연합뉴스)

- 독일 수도 베를린 시내 관광과 역사의 명소인 체크포인트찰리박물관에 북한인권 참상을 알리는 기록물이 상설 전시됨.
- 이 박물관은 과거 독일 분단 시절 동, 서베를린의 미군 관할 국경검문소로 유명한 체크포인트찰리 앞에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임. 사단법인 코모베를린(재독 한인인권옹호협회)은 25일(현지시간) 이 박물관이 최근 상설전시 방침을 정하고 내달 3일 오후 박물관에서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힘.
- 전시물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갖가지 잔혹한 고문 및 총살 장면을 담은 스케치물과 각종 사진 이미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용된 요람, 안내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기록 관련 동영상 등임.

2016. 5. 26.

■ 드론에 남한 드라마 실어 북한 주민에 배달(연합뉴스)

- 2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노체인·No Chain) 정광일 대표는 지난해 초부터 영화, TV 쇼, 음악, 위키피디아 등을 담은 SD카드와 USB 드라이브를 드론에 실어 북한에 보내왔다고 밝힘. 외부 영향으로부터 차단된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임.
- 노체인과 미국 인권재단(HRF)이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낸 SD카드와 USB는 1천 개가 넘는다. 단체는 드론을 띄운 나라와 북한 내 정확한 목적지는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음.
- 정씨는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 인권행사 오슬로자유포럼에서 "희망을 담은 SD카드와 USB가 북한에 자유를 가져다줄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함.
- 토르 할보르센 인권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주민 통제가 약해질까 봐 드라마, 영화, K팝 등을 두려워하고 이를 막으려 한다”며 “더 많은 단체가 드론 날리기에 참여하면 북한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아져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2016. 5. 27.

■ **북한 광물 수출은 강제노동 산물…수출 규제해야(연합뉴스)**

- 북한에서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광물 지하자원이 대부분 강제노동의 산물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 차원은 물론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광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수용소 주식회사'(Gulag Inc.)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이런 (강제노동) 행위는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해 국제사회가 형성한 그동안의 합의 내용을 송두리째 뒤엎는 행위"라며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해야 하고, 만약 대북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상황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힘.
- 함께 참석한 정책연구기관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데이비드 애셔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생산이 "세계경제와 시민사회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점점 통제불능이 돼 가는 (북한) 정권을 통제한다는 면에서도 수용소의 강제노동 체계를 분쇄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5. 24.

■ **北매체, 반기문 총장에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중재 요구(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방한을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함.
-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4일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생이별을 당한 부모와 자식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국제관례이며 인도주의"라며 "남조선에 가는 반기문에게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인권유린 행위를 문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반기문이 진실로 인권보호와 인도주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남조선 당국의 특대형 범죄를 문제시해야 하며 우리 처녀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지를 부림.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5. 23.

■ 민변, 北종업원 가족 위임받아 인신구제 청구(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구제 절차를 밟기로 함.
- 민변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중국에 남아있는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24일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 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13일 국가정보원에 접견을 신청했고 16일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함. 하지만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만큼 접견은 불가능하다’며 민변의 요청을 거부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5. 23.

■ 대북 소식통,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들 또 탈북(연합뉴스)

- 지난 4월 초 중국 Ningbo(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20명 중 13명이 집단 탈북한 데 이어 중국 소재 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최근 또 탈출해 제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복수의 종업원이 최근 탈출해 동남아 제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 정보당국은 이와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말함.

■ 北회령서 세 가족 탈북하다 보위부에 체포(데일리NK)

-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폐막 직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의 세 가족이 집단 탈북했지만,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돼 중국에서 바로 복송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3일 보도함.
-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NK에 “당 대회 직후 회령 거주 세 가족(15명 내외)이 탈북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중국으로 파견된 보위부 체포조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압송됐다”고 전함.
- 소식통은 “한두 명이라면 노동교화 몇 개월 정도 하고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집단 탈북했다는 점에서 (정치범) 수용소행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 “당 대회 때(직후) 탈출했다는 점과 여종업원 집단 탈북으로 정세가 악화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혹한 방향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임.

2016. 5. 25.

■ **中, 北식당 종업원 탈출사건에 “모른다”...확인 거부(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이달 들어 또다시 발생한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출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확인을 거부함.
-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안하지만 나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음.
- 중국 정부가 지난달과 대조적으로 이번 사건은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을 두고 ‘알면서도 함구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이들이 여권 없이 육로로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탈출 북한식당 종업원 3명 중 1명도 태국으로 이동 중(연합뉴스)**

- 지난 16일께 중국 내륙의 산시(陝西)성 소재 한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 중 2명은 현재 태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한 명도 곧 태국에 도착할 것으로 25일 알려짐.
-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산시성 성도인 시안(西安)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3명 중 2명이 이미 태국에 도착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이들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현재 태국으로 가는 중”이라며 “내일(26일)이면 태국의 탈북민 수용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먼저 태국에 도착한 2명의 여성 종업원은 현재 탈북민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출 소식을 최초로 전한 대북 매체 뉴포커스의 장진성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여성 종업원 2명은 안전가옥에 진입했으나 나머지 한 명이 잠시 탈북 과정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나머지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근무지를 중국 상하이(上海)라고 (사실과 다르게) 밝혔”고 해명함. 장 대표는 이들 3명이 근무하던 북한식당은 중국 산시성 웨이난(渭南)시 ‘조양대가 흥생빌딩’에 있는 ‘해루오 샤부샤부’라고 주장함.
- 장대표는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식당인데도 간판에서 북한이 지워진 이유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북한식당과 새롭게 진출하는 식당까지 단독운영이 아닌 합작운영 형태로 바꾸도록 지시한 상태”라고 말함.

5. 대북지원

2016. 5. 25.

■ 국제적십자사연맹,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 차질(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IFRC는 전날 발표한 ‘재난구호 긴급기금 북한활동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밝힘.
- IFRC는 “북한에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등을 비축하려 했지만, 제재로 인해 구호품을 구입·통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재 조항으로 잘못 해석돼 수질정화제 등 일부 구호물품이 지원 불가능한 품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함.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등을 채택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16. 5. 26.

■ 국제적십자사, 北농촌 가뭄·홍수 대비 지원(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서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핀란드 적십자사의 토니 요키넨 대북 사업 담당관은 VOA에 “지난 1일 북한 농촌 재난관리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함경남도 함주와 금야에서 본격적인 지원 활동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말함.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16. 5. 27.

■ 인도, WFP 대북사업에 1백만 달러 지원...2011년 후 처음 (미국의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26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인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에 1백 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힘. 인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지원을 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임.

- 자료에 따르면 이 자금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가뭄과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7월부터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